

주간 통일정세

2015-45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선전매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라” 주장(11/1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실시된 한미 공군의 대비태세 유지훈련(Vigilant ACE)과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발표된 ‘4D 작전계획’,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군의 기념 관함식, 동해상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이는 북침 전쟁연습 소동이 대화와 양립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되새겨 보고 대화 분위기부터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10일 보도를 통해 주장함.
 - 매체는 “(군사훈련으로) 걸음마를 시작한 북남(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릴 수 있으며 더욱이 한반도 정세를 8월 합의 이전의 일촉즉발 상태로 되돌려 놓게 만들 수도 있다”고 위협하면서, “미국과 남조선 군부 패당의 군사적 도발소동은 명백히 북남(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보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며 “사실이 이리함에도 지금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대화에 대해 운운하고 있다”고 덧붙임.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강원도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 선포…미사일 발사하나(11/15, 연합뉴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강원도 원산

앞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면서 “선포된 해상 구역이 상당히 광범위해서 스커드 미사일 또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다른 소식통은 “항행금지구역 선포 기간에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함남 신포조선소 부두에 설치한 해상 발사대가 아직 SLBM을 발사할 정도로 완공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함.
-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 8월 지뢰·포격도발 이후 매달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실제 함대함 미사일이나 신형 300mm 방사포를 해안가로 전개했다”면서 “그러나 실제 발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임.

마. 남북 경제 관계

- 러시아산 유연탄 12만, 北거쳐 南 항구로 온다(11/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3일 통일부의 발표를 통해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3차 시범운송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고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포스코와 코레일, 현대상선 등 우리측 기업 3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사업성 검토의 일환으로 3차 시범운송을 한다”며 이같이 말하였고, 이번 운송은 1, 2차 시범운송 때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시베리아의 쿠즈바스 탄전에서 북한 나진까지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임.
 - 뉴스는 러시아산 유연탄 12만이 국내 광양항과 포항항으로,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중국산 생수가 부산항으로 각각 운송되며, 기업 3사와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우리측 방북단 20명은 러시아 철도공사와 공동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현장검증을 위해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을 방문한다고 설명함.
- 북민협, 민간교류 활기 속 18~21일 방북...인도지원 논의(11/15, 연합뉴스)
 - 국내 59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이번 주 평양을 방문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대북 인도적 지원의 본격적인 재개 방안을 논의한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함.
 - 15일 북민협과 통일부에 따르면 북민협 소속 20여개 대북 지원단체의 관계자 31명이 18~21일 북한 민화협의 초청을 받아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며

- 방문단에는 월드비전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어린이어깨동무 등 주요 대북 지원단체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북민협 관계자는 “지난 시기 사업 자체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사업 아이템을 가져가는 단체는 (사업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힘.
 - 한편 정부 당국자는 “8·25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세 차례에 제안한 남북 당국회담 예비접촉에 아직 북측이 호응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하다 보면 당국회담 개최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꿈틀대는 남북 민간교류…10월 방북 인원 20배 급증(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9일 통일부가 발간하는 ‘월간남북교류동향’ 자료를 인용하여 2015년 9월까지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제외한 남측 방북 인원이 418명으로 월평균 46명이었다고 보도함.
 - 뉴스는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 전시회(개성),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평양),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회의(금강산) 등 남북 공동행사가 잇달아 개최됨에 따라 10월 방북 인원이 880여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9월까지 월평균 방북 인원의 2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덧붙임.
- 남북 종교인, 금강산에 모여 화해·평화통일 다짐(11/1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0일 보도를 통해 남한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스님) 회원 150명과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협회장 강지영) 회원 50명이 9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의 금강산호텔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모임’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보도함.
 - 남북종교인들은 이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종교인들은 7·4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서로의 신앙과 교단을 존중하고 종교인 사이에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강지영 조선종교인협회 협회장은 “북과 남사이에 친척상봉과 노동자축구대회 등 관계개선의 전환적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시기”라며 “7·4공동성명 등 북남합의를 적극적인 실천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가자”고 말했다고 덧붙임.

- 주한미군 유지비 지불 관련 '남조선 인민들이 침략군에게 대가를 지불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남조선은 미국에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라고 비난 및 '주한미군 철수' 촉구(11.10,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우리 정부의 '북인권 결의안' 유엔 상정 참여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대결망동'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의 위험성을 똑바로 알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11.11, 중앙통신·노동신문)
- 제47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제4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개최 및 '4D 작전계획' 수립 등 거론하며 남한 군부는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민족반역 무리, 반통일 집단"이라고 비난 및 '군사적 도발소동 중단' 주장(11.12, 중앙통신·노동신문)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 관련 '남조선이야말로 수많은 모략사건과 온갖 비열한 음모로 인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추악한 인권유린국, 인권범죄국'이라고 규탄(11.13, 중앙통신·민주조선)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발언(싸움에 지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싸움에서 진다면 북한 놈들이 어떻게 보겠느냐)에 대해 '체제대결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며 '종북 타령이 결코 김무성과 같은 특등 친미사대 매국노의 집권야망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없다'고 비난(11.14, 중앙통신·민주조선)
- 남한 당국이 '외세공조의 反北 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남북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파탄될 수 있다'며 '대결정책 전환 용단' 촉구(11.15, 중앙통신·노동신문)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북핵문제 발언(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에 대해 '한반도 핵문제 본질과 근원을 모르는 무지막지한 추태, 남북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복잡성과 장애만을 조성하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비난(11.15,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주장 비난…“핵억제력 발전될 것”(11/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온갖 테러를 반대하는 조선의 원칙적 입장에는 앞으로도 변함없겠지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은 미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강화 발전될 것”이며 “2008년 공화당 행정부가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선심이 아니라 자기식의 기준과 이해관계에 따라 한 일”이고, “테러지원국 딱지를 다시 붙인다고 해서 눈썹 한오리도 까딱할 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통신은 최근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주장에 대해 “우리(북)에 대한 체질적 거부감과 적대 의도에 환장한 자들의 뉘두리에 불과하다”고 비난함.

- 北외무성, “평화협정 앞서 비핵화 진전 美요구는 언어도단”(11/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태 부차관보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전환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완전한 언어도단”이라고 13일 보도를 통해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얼마 전 미 국무부 대북한정책 특별대표는 어느 한 토론회 마당에서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비핵화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며, “1950년대에 시작된 북미 교전관계 때문에 1980년대에 핵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이 비핵화가 먼저 되어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순서 타령을 하는 것은 결국 대북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함.
 - 그러면서 대변인은 “역사적 경험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선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면서 “우리는 지난 시기 비핵화 논의를 먼저 해보기도 했고 또 핵 문제와 평화보장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회담도 수없이 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했으며 그 바탕에는 변하지 않은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가 깔려 있다”고 덧붙임.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북러, '위험 군사행동 방지 협정' 체결(11/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보도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평양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오금철 부총참모장, 러시아 총참모부 니콜라이 보그다놉스키 제1부총참모장,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협정은 불가피한 상황 및 실수로 상대국 군대 인근에서 인명 피해 혹은 물질적 손해를 일으키거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군사활동을 '위험한 군사행동'이라 규정했고, 양측이 상대국 군대 주둔지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군사장비나 병력이 상대국을 침범하는 것을 예방할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으며, 군사활동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평화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함.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독일서 한반도 세미나...북한 대표단 참석, 평화협정 논의"(11/10,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의 '체크포인트 찰리' 회의장에서 북한 대표단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보도함.

- 방송은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의 학자와 민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북한에서는 '조국통일연구원'의 림용철 부원장, 정기풍 실장, 리경식 실장, 그리고 평양외국어대학의 리명진 교수가 초대됐다고 전함.

■ 북, 유엔서 호주 인권 거센 비판(11/11, 인디펜던트)

- 영국 인디펜던트는 11일 보도를 통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 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에서 북한이 오스트랄리아의 인권 유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하면서,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10일 "오스트랄리아는 최근 난민센터 관리들의 성폭력 등 난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설명함.

- '김정은이 黨 창건 7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제시한 인민중시사상과 이론을 연구체득하고 구현해 나가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 11월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및 중앙과 평양시내 당·행정·근로단체 일꾼 등 참가(11.9, 중앙방송·중앙통신)
- 일본에서 어린이 성학대행위성행 및 유엔 특별보고관 현지 조사 결과(여학생들 원조교제 연루 등)를 전하며 "이런 반인륜 국가가 우리(北)의 인권에 대해 떠들면서 놀아대고 있다"고 조소(11.9, 중앙통신)
- 김철학 브라질 주재 北 대사, 11월 4일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11.9, 중앙방송·중앙통신)
- 러시아연방 무력 총참모부 대표단(단장 : 니콜라이 보그다노프스키 제1 부총참 모장), 11월 9일 평양 도착(11.9, 중앙통신·중앙방송)
- 평화협정체결 제안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발언(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속임수 등)들 관련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속임수나 전술로 보는 것은 오산'이라며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주장(11.10, 중앙통신·노동신문)
- 몽골국방성 대표단(단장: 치메도르쥬 쏘쓰르바람 국장), 11월 10일 평양 도착(11.1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11월 5일 앙골라독립 40주년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11.10,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 내각총리, 11월 9일 벨리즈 수상에 재선된 '딘 바로우'에게 축전(11.10, 중앙통신·중앙방송)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것은 현 시기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며 '미국은 北-美 사이의 적대관계를 끝장내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11.11, 중앙통신 논평)

- 韓美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배치 논의 관련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인류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라며 ‘미국의 북 위협 타령은 저들의 도발적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난(11.11,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차세대 폭격기 B-3 개발 관련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침략과 간섭을 더욱 강화해 나가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우리(北)는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길로 더욱 억세게 나갈 것’이라고 주장(11.11,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표단(오금철 부총참모장)과 러시아연방 무력 총참모부 대표단(니콜라이 보그다놉스키 제1부총참모장)의 회담, 11월 11일 평양에서 진행(11.11,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1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이탈리아 대사(마르코 델라 세타) 신임장 접수 및 담화(11.11, 중앙통신)
- 폴란드 독립절에 즈음한 폴란드 연주자들의 연주회, 11월 11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음악당에서 진행(11.11, 중앙통신)
-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 문답(11.12), 美 ‘테드 포’ 위원장(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의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주장에 대해 “우리(北)에 대한 적대도도에 환장이 된 자들의 낚두리”라며 ‘反테러 입장 不變 및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에 핵억제력 강화 발전’ 강조(1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 교토 지방재판소의 조선특산물판매(株) 사장(허정도, 「총련」 허종만 의장 차남) 등 ‘외환법위반 혐의(북한산 송이버섯 부정수입)’ 징역 구형에 대해 ‘법치국가의 날강도적인 반총련 정치모략극’이라며 석방 촉구(11.12, 중앙통신)
- 러-北, 11월 12일 평양에서 「위험한 군사행동방지에 관한 협정」 조인 및 오금철(軍 총참모부 부총참모장)-니콜라이 보그다노프스키(러시아연방 무력 제1 부총참모장) 서명(11.12, 중앙통신·평양방송)
- 北 정부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11월 12일 앙골라 도착(11.12, 중앙방송)
- 러시아연방 무력 총참모부 대표단·몽골 국방성 대표단 등, 11월 12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영식(인민무력부장인 육군대장), 11월 13일 러시아연방 무력 총참모부대표단 (단장: 니콜라이 보그다노프스키 제1부총참모장)을 만나 담화(11.13, 중앙통신)
- 강용덕 駐덴마크 北 대사, 11월 6일 同國 여왕에게 신임장 제정(11.13, 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11월 8일 싱가포르와 외교관계 설정 40주년 즈음 同國 외무상에게 축전(11.13, 중앙통신)
- 마크 릴레이 美 육군참모총장의 발언(미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란다 등) 관련 ‘美 호전광이 평화통일을 입에 올리는 것은 우리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우롱’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진실로 한반도의 평화에 관심이 있다면 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 제안에 응해 나와야 한다’고 주장(11.14, 중앙통신·노동신문)
- 앙골라 독립 40주년 경축행사 참가 北 정부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11월 12일 앙골라 대통령(조제 에두아르두 두스산투스)과 담화 및 대외관계상과 회담 진행(11.14,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1월 14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선포 27주년을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마흐무드 압바스)에게 축전(11.14,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11월 15일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에게 ‘시리아 시정운동’ 45주년 축전(11.15, 중앙통신·중앙방송)
- 올해 일본의 ‘과거청산 회피’를 비난하며 “일본 당국은 모든 반인륜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전체 조선민족이 납득할 수 있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11.15,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리을설 빈소 찾아 조문(1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7일에 사망한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빈소인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을 찾아 조문했음을 전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인민군 원수인 리을설 동지의 서거에 즈음해 8일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 인민군 관계자들이 동행하여 조문했다고 설명하면서, 전날 발표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빠진 최룡해 당 비서(근로단체 담당)는 조문보도에서 제외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 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우였던 리을설 원수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군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말하였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군인들, 인민들이 당과 조국, 혁명에 무한히 충실했던 노 혁명가의 빛나는 삶을 영원히 잊지 말고 그가 지녔던 충실성과 혁명적 신념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 김정은, 리을설 사망에 “군부대 조기 게양” 지시(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7일 사망과 관련해 모든 군부대에 조기(弔旗)를 게양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보도함.
 - 이에 대하여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군의 모든 장병들이 조선 인민군 원수 리을설 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모든 부대, 구분대들은 8일 오후 6시(이하 평양시간)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조기를 띄우라”고 말했으며 “모든 부대, 구분대들은 조기를 띄우는 기간 일체 가무와 유희, 오락을 하지말라”고 지시함.

- 北 김정은,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현지지도(11/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대식으로 새로 지어진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은 설비 현대화에서 국산화 비중을 높일 데 대한 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공장, 우리(북)의 주체적 역량과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면 얼마든지 당이 바라는 국산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실증해준 공장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또한, “당의 현대화 방침에서 중핵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국산화”라며 “남을 쳐다보는데 습관된 일부 사람들이 이곳을 돌아보면 수입병이 싹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이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되었다”며 “중앙과 지방의 많은 일꾼들이 이 공장을 돌아보고 따라배우게 하자”라고 말함.
 - 이번 시찰에는 김양건, 오수용 당비서와 조용원 당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상 등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신상 변동설’ 최룡해, 북한TV 기록영상에 등장(11/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9일 오후 5시30분(북한시간) 방영한 기록영상 ‘김정은 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2015년 10월’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수행하는 최룡해의 모습을 그대로 내보냄.
 - 11월 4일 오후 처음 방송된 이 영상은 최룡해의 신상 변동설이 처음 제기된 8일에 이어 9일에도 방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놓은 박도춘 당 군수담당 비서도 장의위원 명단에는 빠졌으나 이날 중앙TV가 방송한 당·정·군 간부들의 조의식장 방문 영상에는 모습을 드러냄.

- 대북소식통 “최룡해 ‘해임’…협동농장서 혁명화교육”(11/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이 12일 “최룡해는 지역의 협동농장에서 혁명화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숙청까지는 아니고 해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혁명화 교육)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근로단체 담당 당 비서였던 만큼 산하 청년동맹 업무의 성과부진이 아니겠느냐고 추정된다”며 “이번에는 최룡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최룡해는 빨치산 2세대라는 신분 때문에 잘못이 있어도 쉽게 숙청되지는 않을 것”이고 “혁명화교육을 받다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 북한 리을설 ‘장갑차 운구’…“군 원로 최고 예우”(11/12,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12일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평양시내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영결식을 끝내고 대성산 혁명열사릉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리을설의 시신을 운송했던 차량은 북한이 자체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승리 장갑차’로 확인됨.
 - 이에 연합뉴스는 리을설의 시신이 중앙노동자회관에서 발인을 마친 뒤 녹색과 하늘색으로 위장한 장갑차에 옮겨졌고 이후 국가장의위원장을 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3명과 함께 고개를 숙여 예우를 표시하는 등, 리을설의 장례식이 최고 예우로 치러졌다고 보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은 당의 사상 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의 결전장이었고 사상과 신념, 의지의 대결장이었다’며 ‘청년교양사업을 참신하고 전투적으로 하여 모두가 본받아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선동(11.10, 중앙방송·노동신문)
- 제2차 전국 「여맹」 초급일꾼 열성자대회, 11월 11일 김정순(여맹 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11.1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김정일 현지지도사적비 준공식, 11월 11일 박영호(황해남도당 책임비서/준공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재령광산에서 진행(11.11, 중앙통신)
- ‘혁명적인 노래는 투쟁의 대오에 높이 울리는 진군가이며 시대의 행진곡’이라며 ‘노래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黨 제7차대회를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 전진’ 주문 속에 연일 ‘혁신창조’ 선동(11.13,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조
- 조선민주여성동맹 창립(‘45.11.18) 70주년 기념 연구토론회, 11월 13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11.13,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 11월 하순 평양에서 진행 예정(11.14,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70번째 생일을 맞은 정기중(김일성훈장 수훈자인 4.15문학창작단 작가)·박우섭(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교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송한정(원산수산대학 교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과 90번째 생일을 맞은 한병준(김책공업종합대학 실장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에게 ‘생일상’ 전달(11.14, 중앙통신)
-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제7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11월 14일 김정순(「여맹」 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11.14,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11월 15일 北送 비전향장기수 리경찬의 80회 ‘생일상’ 전달(11.15, 중앙통신)
- 김영남·박봉주·김기남·최태복·양형섭·김양건·오수용·로두철 등 黨·국가 책임일꾼들, 11월 15일 미래과학자거리 새 살림집에 입사한 교육자·과학자들 가정 축하 방문(11.15,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북한에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인간 내비게이션 등장”(11/9, 데일리NK)
 - 데일리NK는 9일 평안남도 소식통을 통해 “평양시는 물론 평성과 순천 등 주요 기차역과 장거리 버스 종점에는 외지 손님에게 길을 안내하는 ‘길 봉사 업종’이 새롭게 생겼”으며, “이들은 손님이 요구하는 주소로 안내하거나 상대방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돈을 받는다”고 보도함.
 - 이어 소식통은 “주요 도시 역전에 자전거와 리어커, 통통이(삼륜오토바이)를 이용해 짐을 운반해주는 인력거꾼이 등장한 것은 오래 전 일이지만 길을 알려주고 돈을 받는 ‘길안내 서비스업’이 생긴 것은 처음”이라면서 “길 안내를 해주고 받는 돈은 1,000원~2,000원 정도로 정해졌지만 야밤에 여관이나 ‘대기숙박(민박)’을 알선을 요구하는 손님을 안내하면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서비스가 좋고 깨끗한 숙박집을 안내하면 손님으로부터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받기도 한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러한 길안내 봉사가 가장 성행하는 지역은 평성인데 이곳 버스 종점이나 기차역에 내리게 되면 안내자업자들이 줄레줄레 나타나 ‘정성껏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깎듯이 인사한다”면서 “이들은 상대방의 말투나 옷차림에 따라 장사꾼, 법관(보안, 검찰), 당 간부, 군인 등으로 약삭빠르게 구별한 다음 길안내 봉사 요금을 정하기도 하며, 땡(어리바리)하게 행동하거나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면 바가지 요금을 씌워 남보다 배로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고 전함.
- 북 남신의주 아파트 가격 폭락 이유는(11/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국경지대 소식통들이 “중국이 대교를 한창 건설할 때 남신의주 방 2칸짜리 아파트는 만 달러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5천 달러 대로 떨어졌다”고 전해 왔으며, 중국이 대교를 건설하기 전 남신의주의 아파트 시세는 3천~4천 달러에 불과했지만 다리 완공시점이던 2013년에 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현재 급락했다고 설명함.
 - 방송은 중국이 신압록강 다리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북한 군부가 신의주에 주재하고 있는 외화벌이 지사들에게 다리 끝단이 들어서는 남신의주로 사무실을 옮기라는 지시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성택 숙청 이후

다리 개통 소식이 사라짐에 따라 여기에 투자했던 외화벌이 회사들이 크게 후회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덧붙임.

■ 북, 실적 내려 주민 수탈 계속(11/10,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내년 1월 청년동맹 대회와 5월초 노동당창건 7차 대회를 구실로 현금과 물건을 바치도록 주민들을 압박함에 따라, 당창건 70돌만 넘기면 한숨 돌릴 것으로 기대하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10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당창건 70돌을 핑계로 거둬들이던 당국의 강제모금이 이제는 당 제7차대회로 그 대상이 바뀌었다”며 “당창건 70돌이 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주민들은 중앙의 계속되는 수탈행위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하여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양강도 주민들은 백두산 관광철도 건설과 위연지구 아파트 살림집 건설을 위해 돈을 내라는 독촉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면서 “인민생활 향상이 이런 주민수탈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굳이 인민생활 향상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임.

■ 북 중앙동물원 동물들 폐사(11/10,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노동당 창건 70돌 이전으로 완공한다던 북한 ‘조선중앙동물원’ 개건확장 공사가 절반 수준밖에 진척되지 않아, 무리한 공사로 희귀동물들이 폐사하는 사고가 잇따랐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함.
- 10월 중순 경 북한당국이 조직한 외교정책회의에 참석했다가 최근 중국 내 파견지로 돌아왔다는 한 소식통은 “평양동물원은 노동당 제7차대회를 앞둔 4월말이나 돼야 내부공사까지 완공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지난해 ‘조선중앙동물원’에 대한 보수 확장공사에 이어 올해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설계로 개건확장공사를 진행했으나 노동당 창건일까지 완공한다는 약속은 끝내 지키지 못했다고 덧붙임.
- 이와 관련하여 평양시의 한 주민은 “지난 9월 초 동물원 시설 이전과정에서 전력계통에 고장이 발생해 냉각설비가 4시간 동안 가동을 멈추는 사고가 있었다”며 “이 사고로 극지동물 수 십 마리가 질식사했다”고 전하였으며, 이를 보고받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동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했지만 해당 간부들을 처벌하지는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북극곰과 참대곰(판다)을 비롯한 희귀동물들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함.

■ 북 학교서 학생들 간 상거래 활발(11/1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보도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후 북한이 가내 수공업 수준의 개인 상행위를 묵인하고 있으며, 이런 배경 속에서 장마당을 주축으로 한 개인들의 상행위가 치열한 경쟁을 동반함으로써 상품거래의 안전성과 질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금 장마당은 소매보다는 도매거래 위주로 점차 바뀌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일반 소비품 거래는 학교를 거점으로 한 물물교환 방식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장마당 보다 싸고 믿을만한 거래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을 이런 장사에 떠밀고 있는 실정이라서 학생들의 물물교환 거래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교원들이 중재에 나서 원만히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이와 관련하여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교원들이 꼭 갖추어야 할 필수품은 손전화”라며 “학부모들이 자신의 장사물품의 내용이나 가격홍정,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목록 등을 전화로 직접 자식들의 담임교원에게 부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교원들은 이른바 ‘거래장부’를 만들어 소중하게 보관하는데 학생들에게 배워줄 ‘교수안’은 대충 작성하면서도 학부모들과의 물물 거래내역을 담은 ‘거래장부’는 밤늦게라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가 되고 있다고 강조함.

■ “北여맹원, 간부 뒤통수에 사채 빌려 ‘충성자금’ 바쳐”(11/13,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3일 양강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연말 결산 총화를 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여맹원들은 미달된 과제를 해결하느라 경황없는 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하면서, “인민군대지원 과제나 충성의 외화과제를 미처 하지 못한 여맹원들은 ‘돈주머니를 탈탈 털어야 할 판’이라고 불멘소리를 한다”고 보도함.
- 이어 소식통은 “양강도 혜산시 여맹원들은 1년간 농촌동원 및 사회동원에 빠진 대신 내야 하는 돈을 다 합치면 약 30만 원 정도이고 1인당 군대지원 과제는 10~15만 원 정도를 내야한다”면서 “여맹원들은 인민군대지원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돈벌이 장사에 손을 대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말단 조직인 초급단체의 맹원이 과제수행을 완수하지 못하면 부문위원회 간부로부터 초급단체위원장이 함께 추궁을 받게 된다”면서 “만약 연말까지 과제를 미달하게 되면 초급단체위원장이 지휘 책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계단식 처벌이 있기 때문에 초급단체위원장은 여맹원들의 과제 수행을 강압한다”고 설명함.
- “北 국경경비대 강냉이밥 150g ‘영양실조’”(11/15, 아시아프레스)
 -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내부 취재협력자의 말을 인용해 15일 “수확기를 맞아 군대 식사가 약간 호전되기도 했으나 굶주린 채 시장을 배회하는 병사들이 다수”라고 보도함.
 - 협력자는 “국경경비대에는 한 끼에 150g의 강냉이(옥수수) 밥과 무, 염장과 시래기국만 공급된다”며 “영양실조에 걸려 비틀거리는 군인도 있다”고 전함.
 - 이어 이 협력자는 “당국이 국가에 규정량을 낸 나머지 식량을 자유 처분해도 된다고 통보했음에도 올해 1월 들어 ‘군량미’, ‘애국미’를 내라고 할당해 농민들 사이에 불만이 커졌다”며 “농민들은 도 군량미를 징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말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도이체방크 “북한 관련 거래 않겠다”(11/1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입수한 도이체방크의 최근 재정보고서에 북한이 금융 위험국가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도이체방크가 북한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사실을 보도함.
 - 방송은 도이체방크가 지난 8월 작성한 2015년 상반기 실적보고서 중 ‘미국의 금융제재와 관련한 문제’(US Embargoes-Related Matters) 부분을 보면 금융 위험국가와 거래를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 북한과도 거래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으며, 이와 관련해 전부터 도이체방크는 2006년 북한을 비롯해 이란, 수단, 쿠바 등 네 나라와 미국 달러화로 결제하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듬해인 2007년에는 위험국가들과는 달러를 비롯한 모든 통화를 포함한 기존의 금융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함.

- 김광현(국가과학원 레이저연구소 박사)의 최근 세계과학원 청년회원·국제이론물리센터 회원 등록 및 지난 10년간 국제학술잡지 등 18건 논문 발표 등 연구 성과 소개(11.9, 중앙통신)
- 금성청년출판사 창립 70주년 기념 청소년출판물 전시회, 11월 9일 청년중앙 회관에서 진행(11.10, 중앙방송)
- 각지 협동농장들, 물질약형 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도입(11.10, 중앙통신)
- 제26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개막식, 11월 11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11.11, 중앙통신)
- 김정은 저작(민족유산 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발표 1주년 기념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 보호부문 전국과학 기술발표회, 11월 11일 평양에서 진행(11.11, 중앙통신)
- 평양기관차대 창립('45.11.10) 70주년 기념보고회, 11월 11일 김두일(철도성 정치국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1.11, 중앙통신)
- 중앙산업미술전시회(10.6, '당 창건' 70주년 경축 개막) 폐막식, 11월 12일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임철웅(내각 부총리/폐막사)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우표발행국, 새로 건설된 미래과학자 거리를 반영한 우표(유음전지 1종) 발행(11.12, 중앙통신)
- 평안남북도·황해북도·강원도 등 '올해 전국적으로 10여만 정보의 면적에 수억 그루 나무심기' 등 지난 1년간 "산림복구전투 성과 이룩" 선전(11.12, 중앙통신)
- 제12차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11.11~13) 폐막식, 11월 13일 국가나노기술국에서 진행(11.13,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형직사범대학, 사범대학·교원대학부문 처음으로 대학생 과학탐구 장학금 배출(11.14, 중앙통신)
- 자강도 희천시, 대규모 양묘장 새로 건설(11.14,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北시장서 ‘국정가격 얼마요’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11/13.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3일 보도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상행위를 통해 결정된 시장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사(私)경제 영역이 확대되면서 북한 당국이 공식

결정하는 시장 ‘국정가격’이 거의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대신 가격 상한선인 ‘한도가격’만 공시(公示)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당국이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시장관리소에서도 이를 반영해 국정가격이 아닌 가격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한도가격’만 붙여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고, “‘한도가격’도 이제는 개인 장사꾼들이 파는 상품 가격에 맞춰주고 있어 한도가격의 의미도 퇴색됐다”고 하며 “만약 쌀이 현재 50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 4500~5000원이라는 한도가격을 제시해 놓는 형식이다”고 설명함.
- 뉴스는 이처럼 국정가격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도 북한 당국은 시장가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소식통들이 “도(道) 인민 위원회에서 매일 시장을 돌면서 쌀값 등 시장 물가를 파악해 내각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자기계, 식품 등 각 분야에서 파악하는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시장 물가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고 전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국내입국 탈북민, 13년만에 월평균 100명선 이하로(11/13, 연합뉴스)
 -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입국한 탈북민 수는 977명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2003년 1천285명으로 처음 월평균 100명선을 넘은 이후 2009년 2천914명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1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국경단속 및 감시가 강화되면서 국내 입국 탈북민은 2012년 1천502명, 2013년 1천514명, 2014년 1천397명 등으로 감소했다고 뉴스는 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북 “해외무역일꾼, 제3국인 접촉 말라”(11/1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군대와 내각 등 중앙기관들이 자기부서에 부과된 국가건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에 주재원들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한국인과 미국 등 서방세계

사람들을 절대 접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석탄과 정광, 약초를 팔아 외화벌이 할 때는 외국에 주재하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원자재가 고갈되어 인원을 파견해 중개무역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외 주재원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함.

- 방송은 현재 동남아와 중국 남방에 파견된 조선무역은행과 모란지도국 산하 주재원의 연간 상납금이 약 6만 달러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이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중개무역에 뛰어드는 상황이라고 전함.

마. 사회 동향

- “韓流 영향 北주민, ‘해피버스데이’ 부르며 케이크 촛불 꺼”(11/10,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0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에서 한류(韓流) 바람이 불면서 돈주(신흥부유층)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놓고 생일축하를 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돈주들만 비싼 케이크를 구매했지만 최근에는 케이크를 찾는 주민들이 늘면서 저렴한 케이크를 만들어 개인 집에 배달까지 해주는 전문점이 등장했다고 보도함.
- ‘11월16일은 북한 어머니 날’…주민들 선물 사느라 ‘분주’(11/1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5일 평양 상가와 상점 관리인, 일반 시민 등의 말을 인용해 수많은 주민이 어머니에게 줄 화장품과 꽃을 사려고 상가와 상점을 찾고 있다고 보도함.
 - 광복지구상업중심의 김영옥 부지배인은 중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뜻깊은 어머니날을 앞두고 요즘 많은 사람이 우리 광복지구 상업중심을 찾고 있다”면서 그는 “특히 화장품들을 사서 드리겠다고 하면서 화장품 매대를 찾는 손님들이 특별히 많다”고 말했으며, 평양시내 황금별 꽃상점의 장현옥 책임자는 “손님들은 세계적으로 ‘어머니꽃’으로 불리는 카네이션을 많이 찾고 있다”고 밝힘.

- 금성청년출판사 창립(‘45.11.9) 70주년 기념보고회, 11월 9일 진행 및 리일환(黨 부장)·전용남(「청년동맹」위원장) 등 참가(11.9, 중앙통신)
- 제3차 전국 노동자 농구경기대회(11.9-13) 개막식, 11월 9일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진행 및 김정수(체육성 제1부상)·주영길(「직총」위원장/개막사) 등 참가(11.9, 중앙방송·중앙통신)

- 국제축구연맹 청년급 감독 강습(국제축구연맹 강사 ‘곽가명’ 집행), 11월 4~5일 평양에서 진행 및 체육단 감독들·청소년체육학교 지도교원들 참가(11.9, 중앙통신)
- 북 아시아 U-16 여자축구 4강 진출(11.9, 미국의소리)
- 미림승마구락부, 청소년 과외승마강습 1회 졸업생 배출(11.11, 중앙통신)
- 청년전위들 총정의 이어달리기’ 대열, 11월 5일 함경북도 경원군 도착·달리기 진행 및 11월 11일 김책시 향발(1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청천강체육단(평남도 평성시, ‘72.10.15 창립)의 지난 40여년간 ‘국내·국제 경기에서 5,580여개·110여개 메달 쟁취 등 우수 체육선수 육성 체육단위’로 소개(11.12, 중앙통신)
- 제3차 전국 노동자 농구경기대회 폐막식, 11월 13일 주영길(직총위원장, 폐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11.13,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여자축구팀, 11월 15일 ‘2015 아시아축구연맹 16살 미만 여자선수권 대회(중국)’ 우승(일본팀 1:0 승리) 및 2016년 17살 미만 여자월드컵 참가자격 획득(11.15,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성김 미 특별대표 “북, 6자체제에서 비핵화 뜻 가장 분명”(11/11, 연합뉴스)
 - 성김 특별대표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우드로윌슨센터 주최로 열린 ‘코리아 글로벌 포럼’의 오후 기조연설을 통해 “정말로 6자 체제를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이 체제에서 비핵화 의지를 가장 분명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 그는 “만약 다른(북핵협상) 구도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면(다른 체제를) 물론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6자 체제에서 북한의 참여가 더 발전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이 같은 성김 특별대표의 언급은 미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속에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면서, 6자체제 자체에 대한 의문이 종종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 빌 리처드슨, “북핵 6자회담, 새 구조로 대체해야”(11/11, 연합뉴스)
 - 리처드슨 전 지사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우드로윌슨센터 주최로 열린 ‘코리아 글로벌 포럼’의 오전 기조연설에서 “6자회담이 다른 당사자들에 의해 대체돼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당사자들을 맞이하는 게 중요하다”며 6자회담을 더 많은 당사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구조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는 구체적으로 “노르웨이 같은 다른 서구 국가나, 여러 해 동안 남북한과 의미 있게 관여해 온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중 일부”를 북핵 문제를 다룰 새 체제에 참여할 만한 나라로 지목했다.
 - 또 그는 쿠바를 거론하며 “쿠바의 존재는 북한이 이런 노력(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 다자 체제)에 대해 더 편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쿠바 간 관계를 증대하게 진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나. 미·북 관계

- 미국,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제재…현직대사 제재는 최초(11/14, 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불법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를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미국이 북한의 현직 대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어서 주목되며, 미국은 김 대사가 관여한 불법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장광무역)가 미얀마 현지에서 무기 불법거래 활동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정부의 이 같은 현직 대사 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커 과장이 예상되며, 이 같은 조치는 또 북한과 무기 거래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은 미얀마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 중·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방부 아태차관보, “北 최대안보위협…한미일 정보공유 기대”(11/14, 연합뉴스)
 - 데이비드 시어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2020년대 일본의 안보 역할과 능력’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을 최대 안보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의 효율적 가동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시어 차관보는 먼저 미일 동맹의 가장 큰 안보적 도전과제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우리가 매일 직면해 있는 북한의 위협이 가장 큰 도전 과제”라면서 “에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최근 방한 기간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핵과 미사일 개발, 북한 정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확실히 북한이 가장 당면한 위협”이라고 단언했음.
 - 시어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이런 위협에 맞서려면 한미일 3국 협력을 확대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지난해 말 3국이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음.
 - 그는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이 (제대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모멘텀 확보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역내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튼튼하고 탄력성 있는 3각 협력 체제 구축을 기대한다”고 희망했음.

- 미국, 차대통령 ‘위안부 결단’ 요구에 “해결 가속화 환영”(11/14,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조기타결을 거듭 촉구한 것과 관련, “두 정상에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 애나 리치 앨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OANA) 소속 8개 회원사 공동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가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음.
 - 또 그는 박 대통령이 이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진척이 이뤄진다면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나. 한·중 관계

- 류원산 상무위원, “남북관계 전망 밝아…시간은 좀 필요”(11/11, 연합뉴스)
 -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원산(劉雲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11일 “남북관계의 전망이 밝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류 상무위원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방중한 여야 초당파 국회의원단과 회동에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피력했다고 방중단 단장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전했다.
 - 류 상무위원은 자신의 방북 목적과 관련, “노동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북중관계를 진전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원칙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 그는 이어 “중국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희망하며 이는 중국에도 유익하다”면서 중국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란 입장도 전했다.

다. 한·일 관계

- 日관방장관, “난징학살 기록유산 등록내용 파악 후 대응 검토”(11/10,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난징(南京)대학살 관련 자료의 내용을 파악해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할지에 대해 “현재 (등록된) 내용 확인을 하는 중이며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내용을 토대로 확실히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 스가 장관의 발언은 난징대학살 자료 내용을 검토한 후 등재 취소를 요구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됨.
- 아베 총리, “21C에 어울리는 헌법 추구할 시기”…도쿄서 개헌촉구 집회(11/10,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1세기에 어울리는 헌법을 추구할 시기가 됐다. 우리 자신의 손으로 헌법을 만드는 정신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10일 말했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도(東京都) 소재 일본부도칸(武道館)에서 열린 개헌 촉구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현행 헌법은 점령군의 영향 아래서 원안이 작성됐다”며 이같이 언급했음.
 - 그는 “헌법 개정은 당파를 넘어 대응해야 할 큰 과제”라며 국민적인 합의를 얻을 때까지 각 당의 협력 호소하며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그간 ‘필생의 과업’이라고 밝힌 개헌을 추구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이를 위해 일단 개헌 지지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됨.
- **日, 위안부협에서 재정 활용한 조치 검토 의향 보일 것(11/10, 연합뉴스)**
- 일본은 한일정상회담 후 처음 열리는 11일 군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서울)에서 정부 예산을 활용한 지원을 검토할 의향을 밝힐 것이라고 NHK가 보도했음.
 - NHK는 10일 “일본 측은 (한일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도적 시각에서 위안부에 대한 재정적(정부 예산을 사용한) 조치를 검토할 의향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도했음.
 - 더불어 일본 언론은 일본 측이 협의에서 ‘법적 종결’, ‘인도적 지원’, ‘최종해결 보장’ 등 3대 키워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음.
 -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측은 청구권의 문제가 1965년 일한 청구권경협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해결책을) 타진하더라도 인도적인 지원에 그칠 전망”이라고 보도했으며, “일본 측은 이 문제가 타결될 경우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공개로 하자더니’…한일정상대화 日언론에 잇달아 보도(11/10, 연합뉴스)**
- 한일 양국이 비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일 한일정상간 단독 회담(정상과 소수의 참모만 참석하는 회담) 대화 내용이 잇달아 일본 언론에 보도됐음.
 - 요미우리 신문 10일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군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사실 등 두 정상의 단독회담 대화 내용을 소개했음.
 - 요미우리는 특히 아베 총리가 단독 회담을 시작하면서 “일본 국민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겠다. 대통령도 솔직히 말씀하면 되니 (대화 내용은) 발설하지 않기로 하자”고 말한 사실까지 전했다.
 - 앞서 니혼케이자이신문은 지난 7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한국 측이 요구해온 ‘법적 책임’ 인정에 대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소개하는 등 역시 회담에서 나온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을 보도했음.

- 한국 정부는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히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결국 일본 정부가 자신들 입맛에 맞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그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 위안부 협의의 日대표, “다른 입장 속 점점찾는 노력했다”(11/11, 연합뉴스)

-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의 일본 측 대표인 이시카네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1일 서울서 열린 협의(제10차)에서 “점점을 찾는 노력을 했다”고 밝혔음.
- 교도통신에 의하면, 이시카네 국장은 이날 협의 후 “이 문제(군위안부 문제)가 일한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 점점을 찾는 노력을 했다”고 말했음.
- 그는 차기 협의 일정에 대해 “되도록 이른 단계에서 조정할 것”이라며 조기에 일정을 잡을 것임을 시사했음.

■ 아베 총리, “G20 등 국제회의서 박 대통령과 개별회담 예정 없어”(11/12,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일련의 국제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2일 밝혔음.
- 스가 관방장관은 최근 서울에서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이번에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 아베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말콤 턴불 호주 총리 등과의 양자 회담을 각각 조율 중이라고 스가 관방장관은 덧붙였다.

■ 일본 집권당 중진, “군 위안부, 진심으로 협의하는 분위기”(11/12,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9선 중의원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친선협회 회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진심으로 협의를 추진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12일 말했음.
-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기도 한 가와무라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 등 지원 활동을 펼친 ‘아시아여성기금’의 후속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해 왔음.

-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후속 사업의 존재를 최근에 인지했으며 자신이 이 사업을 확충하는 방안을 거론했을 때 아베 총리가 관심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음.
- ‘시간과의 싸움’된 한일 위안부 협상…여론돌파도 공동 과제(11/12, 연합뉴스)
 - 11일 진행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양국은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확인했음에도 가급적 조기에 차기 협의 일정을 잡기로 하는 등 ‘속도전’ 모드에 들어가 군위안부 협상이 ‘시간과의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해결’을 강조한 측면도 있지만 양측이 서두를 수밖에 없는 주된 배경에는 내년 선거 일정이 있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입을 모으며, 한국은 4월 총선,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가 각각 예정돼 있음.
 - 결국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양국 정부는 합의안에 대한 여론의 저항을 크게 의식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에 서둘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피차 느끼는 상황이며, 그런 맥락에서 양측은 합의안 자체뿐 아니라 합의안이 양 국민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짐.
- 日정부, “군위안부 전력다해 협의중…법적종결 입장은 불변”(11/13,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문제의 타결책을 찾기 위해 “(한일 정부 사이에) 전력(全力)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할 것을 일본에 요구한데 대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군위안부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서 일한관계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위안부 관련 협상 가속화에 합의한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조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가속화하겠다”며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남중국해 갈등에도 미·중 해군, 대서양서 첫 합동훈련(11/9,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의 해군이 대서양에서 첫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는 미·중 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참여한 갈등을 빚으면서도 양국 간 군사 교류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양국 해군은 미국 플로리다주 메이포트항 동남쪽 해상에서 7일(현지시간) 군함들을 투입한 가운데 합동 훈련을 실시했음.
 - 중국 측에서는 미국 우호 방문을 마친 152해군편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 지남(濟南)함, 호위함 이양(益陽)함, 종합보급선 첸다오후(千島湖)함이 참가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미사일 구축함 메이슨스터키함과 순양함 몬터레이함 등 3척이 참가했음.
 - 양국 함정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상통신, 편대 운항, 구조 훈련 등을 실시했다고 중국 인터넷매체 평파이(澎湃)신문은 전했다.

- 中, 카터 美 국방장관 경고에 '적반하장' 반발(11/10,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자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에 대해 '적반하장'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음.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현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는 카터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제질서는 미국의 일부 인사가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음.
 - 그러면서 "중국은 현 국제질서의 건설자이자 수호자, 공헌자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국제적 공평정의의 결연한 수호자"라고 주장했다.
 - 홍 대변인은 최근 이뤄진 난사군도 인근 해역에 대한 미국의 군함 진입 조치에 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엄중히 훼손하고 지역의 긴장 국면을 격화시켰다"며 "도대체 누가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말썽을 일으키는지 명확하다"고 말해 미국이 '적반하장' 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음.

- '친서방' 수치 총선 승리로 中 견제 교두보 확보한 미국(11/10, 연합뉴스)
 -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의 압승이 유력한 미얀마 총선이 동남아시아 정세에 미칠 파급력을 둘러싸고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음.

- 옥스퍼드대 출신의 많은 영국, 미국 정치인들과도 친분을 갖고 있는 수치 여사는 이런 배경 때문에 대표적 ‘친서방’ 인물로 분류되는 터라 미국은 중국의 턱밑인 동남아시아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은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9일(현지시간) 미얀마 총선의 결과가 “외자 유치를 끌어올 것이고,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 오바마는 2012년 미국 현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했고 클린턴 전 장관도 2011년 미얀마를 찾는 등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적 개입 없이 독재 국가에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음.
- 中 ‘남중국해’ 군사외교 힘쓰는다…軍고위층 주변국 속속 방문(11/12, 연합뉴스)
 - 12일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에 따르면 관창룡(范長龍) 중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단장으로 한 중국군 대표단이 전날부터 파키스탄과 인도를 공식 방문하는 일정에 돌입했음.
 - 특히 관 부주석은 2004년 이래 인도를 찾는 최고위급 인민해방군이라고 인도언론은 분석했음.
 -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관 부주석의 이번 순방은 국가 지도자들이 달성한 컨센서스를 실행하고 양국 군대의 우호적인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평화·안정을 함께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이는 중국이 이번 군사외교를 통해 영토갈등 등 양자 현안뿐 아니라 최근 급격히 고조된 남중국해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옴.
 - 중국, 지부티 군사기지 건설계획 순항… 미국 ‘경계’(11/13, 연합뉴스)
 -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이 최근 홍해 입구에 있는 지부티를 방문하면서 중국의 현지 군사기지 건설 계획에 대한 미국의 경계 수위가 다시 높아졌음.
 - 중국 외교부는 팡 총참모장이 지난 9일 지부티를 방문, 자국 상선 보호를 위해 아덴만에 파견한 중국 호위 함대가 지부티 항구에서 보급받는 현장을 시찰했다고 발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음.
 - 미국과 서방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팡 총참모장의 지부티 방문을 계기로 중국의 지부티 군사기지 건설 추진에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번 사태가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정보 수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음.

- 중국은 아프리카 진출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북동쪽 아덴만의 서쪽 연안에 있는 소국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지부티와 협상을 벌이고 있음.
- **美폭격기 남중국해 비행…해상 이어 공중서도 美·中 대립(11/13, 연합뉴스)**
 -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 2대가 지난 주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상공을 비행하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음.
 - 미군이 지난달 구축함으로 인공섬 주변 12해리(약 22km) 이내에 처음 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폭격기를 동원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려 들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해상뿐 아니라 공중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임.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그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평계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훼손하는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음.
 - 이에 앞서 빌 어번 국방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지난 8~9일 B-52 2대가 괌 기지를 출발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근처의 국제 공역(空域)에서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국의 지상 관제소로부터 두 차례의 구두 경고를 받았으나 2대 모두 사고 없이 임무를 계속 수행했으며 작전 내내 철저히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 **위안화 ‘기축통화 편입’ 임박…美·中 통화전쟁 본격화 전망(11/14, 연합뉴스)**
 - IMF는 13일(현지시간) 위안화의 SDR 편입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실무 보고서를 발표하며 조만간 열릴 집행이사회에서 위안화의 SDR 편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음.
 - 위안화의 SDR 편입은 위안화가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는 국제보유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뜻으로,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상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위안화의 기축통화 위상 확보는 결국 달러 중심의 기존 경제질서를 고수하려는 미국과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중국 간의 경제패권 경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음.

- AIIIB는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위안화의 SDR 편입이 확정되면 글로벌 화폐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공화 대선후보들 ‘중·러 때리기’에 두 나라 ‘발끈’(11/15, 연합뉴스, 4:24)
 - 미국 공화당내 대선 예비후보들이 TV토론이나 유세 과정에서 각종 외교적 현안을 놓고 ‘중국·러시아 때리기’를 시도하자 두 나라가 발끈하며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음.
 - 상당수 공화당 후보들이 사이버 안보와 남중국해 분쟁, 환율문제가 나올 때면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시리아 등 중동 문제가 부상하면 러시아를 도마 위에 올린 뒤 난타를 가하고 있기 때문임.
 - 사정이 이렇자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의 대선후보들이 중국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길 희망하며, 무책임한 발언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 쪽도 “지난 10일 공화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러시아가 언급된 경우만 모두 16차례나 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거론한 것은 12차례”라면서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경멸적인 표현이었다”고 지적했음.
- 中 국방부, “美 군함 군용기 움직임 엄중 감시”(11/15, 연합뉴스)
 - 중국 국방부가 미국 군함과 군용기의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에서의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음.
 - 15일 중국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 신문사무국은 전날 최근 미군 B-52 전략폭격기 2대가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상공을 비행한 데 “엄중히 감시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음.
 - 국방부는 성명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이미 중국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난사(南沙)군도’(스프래틀리 제도) 인근 해역 및 상공에서의 미국 군함과 군용기의 활동에 대해 중국 군대는 엄중한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바. 미·일 관계

- 일본 요코스카기지

사. 미·러 관계

- 푸틴 대통령, 美·나토 겨냥 “모든 방어 시스템 뚫는 미사일 개발”(11/11,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이 러시아의 핵 억지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뚫을 새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푸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흑해 연안도시 소치에서 열린 방위산업 관련 안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우리는 어떤 미사일 방어 체제도 극복할 수 있는 타격 시스템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그는 이어 “지난 3년간 다층적인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겨냥해 전투 임무를 수행할 무기 시스템들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며 “이는 올해부터 군에 들어가고 있으며 또 다른 새 무기들을 개발하는 문제도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 러시아, 핵탄두 장착 수중 드론 개발 사실 확인(11/12,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러시아가 비밀리에 핵탄두를 장착한 핵추진 무인 잠수함(수중 드론)을 개발 중인 사실이 확인됐음.
 -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수 성향 언론 매체 워싱턴프리비컨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흑해 연안도시 소치에서 주재한 방위산업 관련 안보 관계부처 회의 석상에서 어뢰 모양의 핵탄두 탑재 고속 수중 드론 개발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국영 TV를 통해 방영됐음.
 - 미 국방부는 이를 ‘카년(Kanyon)’으로, 러시아에서는 ‘스테이터스-6(Status-6)’로 각각 이름붙였음.
 -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미사일 방어(MD)체제를 뚫을 신형 미사일 개발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와중에 드러난 이 수중 드론 개발 사실은 앞으로 군사 측면에서 여파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음.

- 마러, IS 지원자금 출처 공동조사 착수(11/12, 연합뉴스)
 - 러시아와 미국 전문가들이 극단주의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지원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세르게이 이바노프 실장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 이바노프 실장은 “미국이 제안하고 러시아가 참여해 진행된 IS 지원 자금 출처에 대한 올해 조사가 양국 공조의 종착점이 아니라 IS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나 법인, 개인 등을 색출하는 작업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 중·일 관계

- 中해경선, 센카쿠 12해리 진입…중일 양안 정상회담후 처음(11/9, 연합뉴스)
 - 지난 1일 중일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중국 정부 선박이 중일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12해리(약 22km) 해역에 진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통신에 의하면,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2척은 9일 오전 10시 30분(일본 시간)을 조금 지나 센카쿠 12해리 해역에 진입했으며, 선박은 약 1시간 30분 만에 센카쿠 12해리 해역 밖으로 빠져나왔음.
 -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에 대해 중일 뿐 아니라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과 대만은 근래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지 않고 있고, 일본 쪽에서는 양안 정상회담 후 중국과 대만이 센카쿠 문제 등에서 대일 공동전선을 본격적으로 펴지 않을까 경계하는 상황임.
- 아베 총리, “자위대 남중국해 파견, 검토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11/12,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경계·감시 활동을 위해 자위대를 남중국해에 파견하는 것에 관해 “여러 선택지를 염두에 두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싶다”고 11일 말했음.
 - 그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의 폐회 중 심사에 출석해 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경계·감시 활동을 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여지를 남겼음.
 - 아베 총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조성한 인공섬 12해리(약 22.2km) 이내를 미국 구축함이 최근 통과한 것이 “국제사회의 선두에 선 것이며, 지지한다”고 언급했음.
 - 그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 해군의 연합 훈련을 예로 들며 “앞으로도 양국 간, 다국간 공동훈련이나 연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日방위성, “中군함, 센카쿠 주변 공해 반복 항행”(11/13,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 1척이 최근 동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부근 공해상을 반복 항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음.
 - 방위성에 의하면,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일본 해상자위대 제5항공군(나하시) 소속 P3C 초계기가 센카쿠 열도와 사키시마(先島) 제도의 중간 부근 해상에서 서쪽으로 항해하는 중국 정보수집함을 발견했음.
 - 이 배는 동서로 방향을 바꿔가며 항행한 뒤 12일 오후 7시경 해당 해역을 빠져 나갔다고 방위성은 전했다며,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12해리(22km) 해역과 센카쿠 접속수역(12~24해리=22~44km)에는 진입하지 않았음.
 -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이 일본 근해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훈련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항행의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는 분석했음.

- 아베 총리, 中정상 참석회의서 ‘남중국해 우려불식’ 촉구키로(11/13,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중 열리는 일련의 다자 정상회의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행동을 중국에 촉구한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음.
 - 아베 총리는 G20정상회의(15~16일·터키), APEC정상회의(18~19일·필리핀), 아세안+3 정상회의(21~22일·말레이시아) 등 자신과 중국 정상(시진핑 국가주석 또는 리커창 총리)이 나란히 참석하는 회의 때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할 방침임.
 - 닛케이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발언할 예정이며, 더불어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거점화할 의도는 없다’는 시 주석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식해야한다’고 촉구할 방침임.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유엔서 호주 인권 거센 비판(11/11, 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10일 “오스트랄리아는 최근 난민센터 관리들의 성폭력 등 난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1월 11일 보도했음.
 - 하지만 인디펜던트는 북한 대표의 인권 개선 요구를 전하며 “북한의 비난은 위선적으로 들린다”고 지적했음.
 - 북한은 한국과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납치 등 강제복송은 물론 자국민 수만 명을 강제수용소에 불법 감금해 고문, 사형을 행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 인디펜던트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각종 인권 탄압·유린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북한의 모순된 행동을 지적했음.
 - 이와 관련해, 미국 북한인권단체 디펜스 포럼 수잔 솔티 회장은 중국의 강제 복송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근 들어 더 악화됐다면, 북한이 오스트랄리아의 인권에 대한 비난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설명했음.

- 북 “해외무역일꾼, 제3국인 접촉 말라”(11/12, 자유아시아방송)
 - 대규모 인력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에 매달리고 있는 북한이 한편으론 잇따라 탈출하는 무역 주재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경을 통해 연락이 된 북한 소식통은 “군대와 내각 등 중앙기관들이 자기부서에 부과된 국가건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에 주재원들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한국인과 미국 등 서방세계 사람들을 절대 접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음.
 - 이러한 지침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북한 주재원 가족이 통째로 실종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더욱 강화된 지침이라는 게 그의 설명임.
 - 소식통은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석탄과 정광, 약초를 팔아 외화벌이 할 때는 외국에 주재하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원자재가 고갈되어 인원을 파견해 중개무역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외 주재원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했음.

-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주재원들은 특히 적대국가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하며 설사 투자를 받더라도 중국 현지인을 통해 받는 게 원칙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 때문에 북한 무역 일꾼들은 중국 현지인들에게 중개 수수료도 때 쥐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임.
 - 소식통은 “북한 주재원들은 맨손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와 협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이를 배후에서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간부들은 ‘역적질만 하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오라’고 주재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설사 주재원이 외국에서 돈을 협잡해가지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 그를 은폐시킨다”고 말했다.
 - 현재 동남아와 중국 남방에 파견된 조선무역은행과 모란지도국 산하 주재원의 연간 상납금은 약 6만 달러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은 이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중개무역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적십자 ‘북 주민에 식수 절실’(11/12,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적십자사는 12일 북한의 평안남도 신양군에서 벌이고 있는 ‘재난 관리’ 사업에 대한 글을 올리고, 미화로 21달러면 북한의 한 가구에 마실 물을 지원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음.
 -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수년간 북한은 가뭄, 홍수, 산림황폐화,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주민들의 안전과 가축 피해가 막대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 국제적십자사는 특히, 평안남도 신양군에서 펼치고 있는 보건의 위생 사업을 전하며, 이 마을의 김영애(52세) 씨를 인용해 “물을 구할 수 있는 수도 시설이 생긴 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고 소개했음.
 - 그러면서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의 농촌 지역에는 김영애 씨와 같은 사람들이 1만 5천명이나 있다면서, 자연 재해로 인해 식수와 위생과 관련해 열악한 환경에 처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음.
 - 국제적십자사는 이에 대해 한 가정에 식수 처리기를 한대 설치하려면 미화로 21달러 밖에 들지 않는다는데, 적은 비용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예라는 설명임.
 - 마약하는 북한 고위간부 늘어(11/13, 자유아시아방송)
 - 평양과 함흥을 중심으로 제조되기 시작한 북한산 마약인 빙두, 즉 필로폰을

- 고위간부들까지 사용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는 소식임.
- 국경지방을 통해 연락이 된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금 조선(북한)에 빙두 제조업자가 3천 명이 넘는다는 말은 상인들 속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이들이 제조하는 빙두는 북한 내부는 물론, 중국으로 확산돼 중국당국에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북한 사람들은 빙두를 감기예방용 ‘만병통치약’, 뇌졸중과 심혈관계 질병에 효과가 뛰어난 ‘최고의 구급약’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음.
 -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에서 마약이 구급약이나 예방약처럼 쓰이고 있다는 주장임.
 - 또 다른 북한 주민도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이 줄음 때문에 총살된 것도 빙두를 과다 복용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평양 시민들 속에 퍼졌다”면서 “그래서 빙두하다 줄면 총살된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온다”고 언급했음.
 -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4월 24일과 25일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주재한 제5차 인민군훈련일군대회에 참석해 주석단에 앉아 줄다 불경죄에 걸려 처형됐다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밝힌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현영철은 425훈련소 여단장 시절 영접행사를 잘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눈에 들어 국방위원회 615사업국장을 거쳐 인민무력부장까지 승진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불경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면서 “어찌 보면 대회기간 더 각성하기 위해 마약을 했다가 봉변을 당했을 거라는 동정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2. 북한인권

- 유엔서 북 인권 전문가 토론회(11/10, 자유아시아방송)
 - 뉴욕 유엔본부 일본대표부의 관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회원국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11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음.
 - 이 관리는 유엔 회원국들을 초청해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심층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그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가 오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투표나 합의로 통과될 예정인 북한인권 결의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음.

- 로베르타 코헨 연구원은 북한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계속 다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코헨 연구원은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그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 그는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기구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식량이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유럽연합과 일본 대표부는 지난 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의 조항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 회원국에 소개한 바 있음.
 -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해 왔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조항을 처음으로 결의안에 포함시켰고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의제로 채택했음.
- 외교차관 “北, 대북인권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 보이기 시작”(11/11, 연합뉴스)
-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11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북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실질적인 인권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음.
 - 조 차관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마그나 카르타 800년,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를 주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서울인권회의’에서 오찬사를 통해 “그동안 국제사회의 어떤 규탄과 비판에도 귀 기울이지 않던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해 조 차관은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의 여타 인권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한 데 이어 3월에는 인권이사회에 북한 외무상이 처음으로 참여했다”면서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의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자이드 최고대표의 방북을 초청하는 등 이례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설명했다.
 - 그는 “북한이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면서 “이런 움직임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 차관은 “마그나 카르타(영국 대헌장)는 지난 800년간 지구촌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나침반 역할을 해왔지만 불행히도 북한은 민주주의를 향한 이 대장정의 대오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음.
-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핵문제와 함께 대북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삼고 있으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유엔총회서 북한인권 결의안 지지 국가 꾸준히 증가(11/11, 미국의소리)

-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05년이었음.
- 이 때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는 84개국, 반대 22개국, 기권 62개국으로, 반대하거나 기권한 나라와 찬성한 나라가 각각 84개국으로 같았음.
- 하지만 이듬해인 2006년부터 찬성하는 나라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1백 개, 2011년에는 1백 12개 나라로 늘었음.
- 또 지난해에는 기존 결의안에 비해 매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음에도 찬성한 나라가 1백 11개국에 달했음.
- 특히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하는 나라가 5개 더 늘어난 1백16개국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음.
- 유엔주재 룩셈부르크대표부의 실비 루카스 대사는 지난 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 같은 추세로 미뤄볼 때 올해 표결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반면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대하는 나라는 2005년 22개에서 2008년 24개로 최다를 기록한 이후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9개를 기록했음.
- 이들은 주로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로,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밖에 결의안에 기권하는 나라들도 2005년 62개에서 지난해 55개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 “북한인권 문제는 통일 위한 필수과제”(11/11, 미국의소리)
 -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가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밝혔다.
 - 박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찾아서’를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서울인권회의’에 보낸 서면 메시지를 통해 북한 주민의 더 나은 삶과 남북한 민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박 대통령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논의해 왔다면서 이제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다 폭넓게 진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번 서울인권회의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라모스 호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맡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 라모스 전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각국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면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라모스 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정권은 사실상 공산주의 군주제이자 절대주의 왕정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위해 일어설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와 함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70년 분단국가로서 북한인권 개선 뿐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인권 개선과 통일 후 사회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방한…북한 인권문제 협의(11/11, KBS 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한미간 북한 인권 문제 정례 협의를 위해 11월 10일 입국했음.
 - 킹 특사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방한기간,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권용우 평화외교기획단장 등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 대응 방안을 논의함.
 - 특히 유엔총회 3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 등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논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킹 특사는 북한 인권을 주제로 열리는 ‘서울인권회의’에 참석하고 지난 6월 서울에 문을 연 유엔북한인권사무소를 찾아 그 동안의 활동 상황을 들을 예정이다.

- 유엔 북한인권 보고관 “北 반인권범죄, 세계 어디서든 처벌 가능해야”(11/11, 국민일보)
 - 마루스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1일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권 범죄를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는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재판할 수 있는 ‘보편적 재판관할권’을 북한 반인권 범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임.
 - 서울인권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세계 어떤 나라의 법원도 북한의 반인권 범죄와 관련한 사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보편적 재판관할권의 개념”이라며 “유엔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역설했음.
 - 그는 보편적 재판관할권을 적용하는 절차에 대해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요구될 수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정치기구를 통해서도 결의될 수 있다”며 “(결의가 되면) 보편적 재판관할권은 각국이 판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례를 보면 과거 스페인 법원이 보편적 재판관할권을 내세워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 체포 명령서를 발부한 바 있음.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반인권 범죄를 자행한 인물은 물론 반인권 범죄를 승인하거나 지시한 인물에 대해서도 보편적 재판관할권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반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유엔에서의 논의 시점에 대해 그는 “올해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와 일반적인 책임 규명에 집중하고,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올해 12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지난해 116개국이 지지한 북한 인권 결의안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음.
 - 그는 “지난해 이후 북한 인권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유엔의 권고를 따르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재차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3. 탈북자

- “한국 정부 지원 못 받는 비보호 탈북자, 통일 위해 끌어안아야”(11/13, 미국의소리)
 -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면 기본적인 정착지원금이나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음.
 - 비보호 탈북자란, 입국이 허락돼 한국 국민이 됐지만 보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탈북자임.
 - 한국 통일부의 ‘탈북자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국제 형사범죄자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한국 입국 후 1년이 지난 탈북자, 중국 등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탈북자 등은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됨.
 - 지난 2003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비보호 대상자는 172명, 이 가운데 한국 입국 1년이 지나 비보호 대상자가 된 탈북자는 126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음.
 - ‘비보호 탈북자 정착 실태와 정책 제언’을 위한 세미나가 11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 주관으로 열렸음.
 - 한국 통일부의 ‘2015 탈북자 거주지 정착 지원 매뉴얼’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보호대상자가 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먼저 한국사회 적응교육 시설인 ‘하나원’에서 12 주에 걸친 기본교육을 받은 후 관할지역 하나센터에서 2주간 60시간의 교육과 사후 지원을 받음.
 - 하나원을 나와 지역사회에 진출하면 정착금으로 1인 기준 미화 약 6천 달러가 지급되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할 경우에는 장려금도 나옴.
 - 이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탈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면 ‘남북하나재단’이 주는 860달러 상당의 긴급생활 지원 외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재호 정착지원본부장은 매년 30명이 넘는 탈북자가 비보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들을 위한 교육, 정착지원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이산가족

- “남한 이산가족 과반 생사확인 동의”(11/10, 자유아시아방송)
 - 이산가족들의 유일한 소망은 죽기 전에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임.
 - 그러나 상봉자로 선정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이산가족들은 가족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어함.
 -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북측에 전면적 생사확인을 제안한 바 있음.
 - 최근 남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6만 명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음.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 특강에서 “6만 명 가운데 3만 명 정도가 생사 확인에 동의했다”고 밝혔음.
 - 그러나 나머지 3만여 명은 연락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생사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홍용표 장관은 “북한도 생사 확인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 “이산가족에 대해서도 고령화와 상봉 방식의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음.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쌀값 폭락, “대북 지원 당장 이행해야”(11/15, 자유아시아방송)
 - 남한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 424만1천t 보다 0.4% 증가한 425만8천t이 될 전망이다.

- 그러나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감소하니 쌀값도 떨어지고 있어, 지난달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5년산 쌀의 수확기 전국 평균 가격이 20kg당 3만8천500원, 즉 미화로 33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음.
- 더 큰 문제는 재고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으로, 9월 말 기준으로 남한의 쌀 재고는 136만t. 남한에서는 약 2천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임.
- 쌀 재고가 많아질수록 보관비용도 커져, 쌀 재고 136만t을 보관하려면 4천1백억 원, 미화로 3억5천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옴.
- 남한에서는 창고에 쌓여 있는 쌀을 어떻게든 소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임.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효남 의원은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쌀값 회복을 위해 대북 쌀 지원 등을 당장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의 대북 쌀 지원도 끊어진 상태임.
-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난달 8일 쌀 40만t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북 쌀 지원 방안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데, 쌀 지원은 인도적 문제일 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국내 정치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임.
- 정부는 현재 쌀 재고 활용 방안으로 쌀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 활성화 등에 주력하고 있음.

8. 북한동향

- 우리 정부의 ‘북인권 결의안’ 유엔 상정 참여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대결망동’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의 위험성을 똑바로 알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11.11, 중앙통신·노동신문/대세에 역행하는 대결망동)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